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6. 12.(목)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삼석 위원께서 6월 9일에 임명되셔서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인사 겸 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존경하는 방통위원장님,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은 고삼석입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74일을 지각해서 이제 합류했지만 저는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학계에서 방송통신정책을 다뤘던 경험을 살려 방통위의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처리하고, 방통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더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을 빌어 최근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히 말

씀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언론에서는 저를 포함한 5인의 방송통신위원이 모두 임명되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상화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적 구성요건의 충족만으로 방통위가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보도참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큼니다. 혹자는 “한국의 언론이, 그리고 방송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KBS와 MBC를 주축으로 한 공영방송의 역할 부재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문제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방송 현장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통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키다 부당하게 쫓겨나고, 징계를 당해도, 그리고 언론인들과 국민들의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권리가 억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제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방통위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통위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입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지켜본 방통위는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책무를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수적 우위를 무기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압도적 추천을 받아 임명된 만큼, 모든 사안을 방송통신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눈과 귀는 항상 크게 뜨고 열어 놓겠습니다.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행동이 필요할 때는 책임감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법이 정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방통위원의 책무를 성실하고 바르게 수행하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각종 미디어는 범람하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방송과 통신 미디어의 책임이 큼니다만, 이를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의 역할 부재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창조방송’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가 방통위 정책비전과 목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대신, 창조경제 구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가운 자본의 구호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영역이야말로 돈보다는 사람이, 기업보다 소비자가, 사익보다는 공적 가치와 이익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통신정책을 고민하고, 결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마지막으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적 책무를 확립하는 것은 방통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낙하산 사장’ 논란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의 준수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송과 통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즉 법과 원칙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군자무본(君子務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근본에 충실하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임기 동안에는 대화와 타협, 존중과 배려, 이해와 양보 등이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고삼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지난 회의 · 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5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2014-21-077)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5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고낙준 재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2015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결주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6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으로 201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첫 번째 개

요로서 세입은 1조 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349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686억 원입니다. 다만, 기금수입 부분은 미래부와 공동관리이기 때문에 미래부 소관 수입이 포함된 전체 금액입니다. 세출은 1,999억 원으로 일반회계 479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520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조 35억 원으로 '14년도 대비 1,178억 원 10.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9억 원으로 '14년 대비 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통법 시행과 통신시장 안정화에 따라 과태료수입 및 기타 경상 이전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9,686억 원으로 '14년 대비 1,100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자체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유자금 감소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세출입니다. 총 세출은 1,999억 원으로 '14년도 대비 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479억 원으로 '14년 대비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520억 원으로 '14년 대비 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편성 기본방향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모니터링,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역방송 관련 예산들을 신규 편성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방송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신규사업은 6개 사업에 총 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방향에 맞게 법률 개정, 재난방송 예산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활성화 6억 원, 그리고 터널·지하공간 재난방송 중계시설 지원에 20억 원, 그리고 기타로 지상파방송 콘텐츠 외국어 자막지원에 5억 원 등 총 6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은 20개 사업에 1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1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국회 지적사항, 평가미흡 등을 반영하여 13개 사업에 2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요구서를 오늘 의결해 주시면 6월 13일 내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9월까지 마치고,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15년도 사업예산 편성내역 중에 편성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그다음에 안전 관련 예산 증액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 즉 방통위원회의 정책기조나 그다음에 심사방향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고, 또 여기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안전자료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즉, 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예산 반영을 제외한다면 안전 관련 예산 증액이라는 그 부분만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안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예산이 약 2,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위원회의 정책기조나 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명확하게 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5년도 예산안은 제3기 방통위원회가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내놓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인 만큼 위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기조와 정책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일단 편성 기본방향 법령 개선사항은 그동안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첫 번째 단말기 보조금 모니터링 관련에는 보통 저희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는 것이 되겠고,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의 공공성이 가장 핵심적인 이념으로 담겨 있습니다. 미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저희 정책방향은 주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지역방송 예산 신규 편성이 증액이지요? 2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23억 원 증액 된 것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지역방송 관련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역방송들의 콘텐츠 제작에 지원사업이 20억 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예산도 증액하고, 신규로 지역방송 콘텐츠가 중앙방송이라든지 더 나아가 해외까지 유통될 수 있는 예산까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2개로 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법령 개정사항 반영이지 않습니까? 지난 6월 3일에 지역방송발전 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됐고, 금년 12월 4일에 시행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특히 관련 특별법 제7조제4항을 보면 “지역방송 발전지원 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기주 위원님께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위원으로 저희 대표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이따 제가 의견 드릴 때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여정부 초기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국고가 그때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제가 알기로 10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물론 신규로 반영하고 증액했다지만 예산 규모가 아주 작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운용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법령 개정사항이나 입법취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반영한 예산인지 약간 의문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추가적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주신 의견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기조와 관련된 예산이 명확하게 반영되었는지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기재부와 협의할 때 좀 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저희가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런 예산들은 입법이 있기 이전에 미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고삼석 위원님의 지적,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제3기 방통위의 정책 기본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정책중점, 정책방향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방송의 공적책임이지요. 공공성과 공정성입니다. 이것을 확립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프로젝트, 학계나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보면 그런 예산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붙임>을 보면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의 항목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도 괜찮은 상황인지, 작금의 상황을 보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것은 금감원의 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과 관리와 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할 텐데 그것을 연구하고 어떤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기 위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줄

어든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한류 콘텐츠 향상, 국제교류 확대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류 확산', '한류 확산' 이야기해 왔지만 국내 지상파를 비롯해서 또 외주제작사들의 콘텐츠 생산, 그 질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국제시장 진출 확대인데, 좋게 이야기하면 국제교류 확대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법정위원회 활동 예산이 또 줄었는데 그나마 얼마 안 되는데 또 1억 원 정도 줄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11개 법정위원회, 그중의 3개는 외부, 8개 상임위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정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책활동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맡고 있는 방송평가위원회도 있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도 있고, 이런 법정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정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강·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시청자권익증진보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보니까 대체로 그냥 민원불만 해소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시청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미디어센터도 우리 산하 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중점을 가진 분야의 그런 항목의 예산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꾸로 줄어들어드는 데가 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답변해 주시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성 관련 부분의 지표는 제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고, 그 예산을 담당하는 방송정책국과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어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큰 카테고리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말씀하신 법정위원회까지 다 함께 포괄해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 다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의 세수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 예산지출한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얼마 없는 예산이지만, 저희가 올해 507억 원이지만 479억 원으로 28억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하다 보니 일부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할 때 최선을 다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덧붙여서 일반회계는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경직성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려운지 압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에 바탕을 한 예산은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책 활동 결과로 나온 것이지만 우리가 과징금으로 기금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방송통신발전을 위해서 쓰라는 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송평가, 공적책임을 올리기 위한 평가작업, 연구과제, 그 용역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의 향상 방안, 그리고 국제교류 이런 것도 방통발전기금에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권익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그것 역시 예산 못지않게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고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정책활동 결과 거둬들인 과징금이나 또는 방통발전기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롭게는 못하지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예산 신청할 때도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기금은 그나마 재원에 여유자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규사업을 쓰는 데는 일반회계보다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사실상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할 때 충분히 협력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산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예산절차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 지적하신 개인정보보호는 늘었지만 하여간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 또 법정위원회 활성화, 한류 콘텐츠 확산이나 국제교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일반회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을 일부는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일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동일한 사업을 양 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중복사업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사업으로 예를 들어 쓰다가 약간..., 어차피 저희가 방송통신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으로 다시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모사업에서 자사업으로 하나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로 이용자보호 관련은 일반회계인데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특별해서 기금으로, 신규사업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 부분이 일반회계에 있지만 사이버폭력은 별도로 빼서 기금으로 사업을 만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편성은 가능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혹시 그런 식으로라도 편성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기재부와 협의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내년도 지출한도가 1,999억 원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금년도 방통위 예산 확정된 금액이 1,963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은 지출한도와 금년도 예산 규모와 비교해 보면 3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나 김재홍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예산에 반영 내지는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공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통보받은 지출한도가 금년 예산 규모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안전 관련 예산, 개인정보 관련 예산을 다 증액하고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하는 대신에 그만큼 다른 예산은 감액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의 현재 예산 편성구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방통위 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한 이 안건은 제가 보기에 기재부의 지출한도 규모 범위 내에서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자료 이런 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덧붙이면, 아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그것도 역시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통위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 못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기금 심의를 할 때 방통위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3기 방통위가 출범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 작업을 지금 사무처와 우리 위원님들과 공동으로 작업 중에 있는데, 이것과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기재부 협의 예산 규모와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저는 제3기 정책방향이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 기재부와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꼭 반영됐으면 하는 것을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재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3기 방통위원회는 제1기, 제2기를 거치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의 예산 구조도 제3기 방통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과제에 걸맞게 재편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부 이런 사업 예산들, 그리고 지원예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흥을 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 위주로 제1기, 제2기 방통위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함과 동시에 제3기 방통위는 어떻게 보면 규제전문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정책이슈, 제도이슈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정책개발, 필요한 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나 해외 사례를 수집한다든가 또 해외에 관련된 국제기구 내지는 해당 국가와의 정책교류, 제도교류를 위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그런 차원의 예산일 것이고, 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을 듣기 위한 그리고 여러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저는 충분히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과거의 방통위보다는 사업, 진흥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제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쪽의 기능에 포커싱(focus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구조로 시프트(shift)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유럽의 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판결 이후에 국내외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이런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서 우리 현행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과 제도를 끌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저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3기 정책과제가 확정이 되면 2015년 이후에 방통위의 예산 구조, 내역 이런 것들이 한 번 재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예산구조, 내역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정책 연구과제가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실·국에서 사실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제약 때문에 편성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붙임>자료에 보면 6가지의 신규 사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재난방송중계 시설지원, 그리고 지역방송콘텐츠 유통활성화 지원, 지상파방송콘텐츠 외국어 자막제공지원, 그리고 양성평등미디어환경 조성, 남북방송통신교류통일기반조성 등 6가지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알겠지만 지역방송콘텐츠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양성평등미디어환경 조성, 그리고 남북방송통신교류통일기반조성, 그 3가지 부분은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지역방송콘텐츠 유통활성화는 말 그대로 저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역방송사에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래부에 같이 묶여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역방송들이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별도로 올해부터 편성했고,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해당 지역방송에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방송사라든지 나아가 필요하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미디어환경 조성은, 국가적으로는 3, 4년 전부터 성인지 예산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등이나 특히 방송에 보면 은연 중에 남녀 차별적인 언어들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 방송인들이나 언론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방송통신교류통일기반조성 사업은 저희가 교추위라고 방송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방송을 교류하기 위해 예산들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KBS는 북한과 공동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일을 대비해서 서로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필요하면 공동제작할 수 있는 예산들을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가서 심의 확정을 받아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또 예산 소위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협의해야 할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잘 경청해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8조를 보면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은 경상비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사업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런 것들은 지금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무합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현재 방송사 콘텐츠 제작지원과 방송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지원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협회나 이런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들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그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방송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해야지요. 왜냐하면 법을 개정해서 그 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 **고낙준 재정팀장**
 - 다만,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협회나 이런 것들이 관련된 공적기능을 하는 기능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예산 팀이기 때문에, 위원회 내에 별도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부터 혹시 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지역방송이나 관련 단체에 의견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고낙준 재정팀장**
 - 저희가 직접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법 개정사항에 대한 대응으로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법정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있고, 제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고삼석 위원님께서 같이 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조기에 소집해서 한 번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데 역할이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4페이지 <표>를 보면 금년도에 6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88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동일하게 6개 사업인데 44억 원입니다. 이것이 예산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예산이 반 토막 난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지출한도 '14년도, 4페이지 <표>를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기재부에 제출할 때 4개 34억 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6개 85억 원으로 증가가 됐고,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 6개 사업에 88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2개 사업을 더 늘렸고 그리고 국회 확정 과정에서는 금액을 더 늘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작년 단순 제출로만 본다면 2개 사업에 10억 원을 더 증액해서 저희가 발굴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수사업이라고 한다면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3.0, 안행부에서 작년에 마련한 것 같은데,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부처별로 정부3.0에 맞추어서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방통위원회에서 담당은 방송광고정책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지원, 이것 아십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4년~17년까지 전체 총 106억 원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제가 알기로는 광고비 할인지원은 코바코 자체 수익으로 금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 담당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범정부적으로 정한 사업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참고로 혁신형 중소기업은 제가 작년에도 신규로 반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광고 외 다른 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광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마지막에 누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부3.0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계획인데 그것을 기재부가 단독으로 관련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 부처를 다 보다 보니까 혁신형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플러스해서 광고까지 추가로 하는 데 대해서 재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이 수립될 때 기재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정작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못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담당자들에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광고비 70% 할인 부분은 코바코 자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투입이 안 된 것이고, 앞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광고정책과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 다든지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라디오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라디오광고 지원 부분 예산들은 내년도에 일부 방송광고 활성화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잘 알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추진일정에 기재부 제출 6월 13일은 무슨 뜻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기재부가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한 날짜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이 6월 12일인데 기재부 제출 예산(안)을 오늘 논의해서 다시 짤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저희가 제출이라고 하면 서류상 제출이 아니고 사실상 실무자들이 보면 예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 프로그램별로 세세항 단위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동이 어렵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인데 일단 기재부에 제출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냈지만 오늘 상정한 안건의 세부내역을 수정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일단 제출해 놓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안건으로 상정될 때는 기획조정실에서만 참석하지 말고 각 국의 예산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라도 다 참석해서 지금 고 팀장이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어느 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증액 필요성이나 신규편성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trade off)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안은 일단 의결하되, 조만간 우리가 제3기 정책과제를 마련하면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가감 내지는 구조를 변경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기재부와 협의할 때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료 마지막 4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의 위원회 지출한도가 1,746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와 같은 예산안은 여기에 맞춰서 제출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증액됐다가 또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 단계에서 그중에 80억 원 정도 삭감이 돼서 결국에 전체적으로는 220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안은 우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협의과정이 보

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를 증액할 수 있고, 또 증액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열어서 오늘 나온 것들을 총 정리해서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할 때 전략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오늘 이것이 초안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해서 일단 기재부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시면서, 오늘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고,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5페이지를 보면 증액사업 제일 밑부분 기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등 9개 사업이 금년도 331억 원에서 내년도 449억 원으로 118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아마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증액사업의 대부분을 여기에서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하면 이것을 기타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청자권익보호 활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별도로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총 20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청자권익보호사업이 20개 사업 전체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총 9개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금액은 크지만 주로 어떻게 보면 위의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사업들입니다. 시청자권익보호 활동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것들이 미디어 어센터 예산들이고 그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분도 증액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다 모여져서 포함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개 사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정도, 절반 정도만 지금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아십니까? 20개 다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가장 큰 것들이 말씀 드리면 EBS 출자하는 것이 98억 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미디어센터가 31억 원, 그리고 방송통신심의활동 강화에 12억 원, 그런 것들이 증액됐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니까 교육방송에 대한 출자는 98억 원으로 증액 되어 있고,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등의 118억 원 중 대부분이 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출자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출자가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지원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항목으로 보면 이것을 시청자권익보호 활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회의자료가 공개로 분류되어 있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관련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언론, 유관기관에서 다 볼 텐데, 이것을 EBS에 대한 출자, 또는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지원을 광의로 보면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엄밀하게 보면 시청자권익보호 활동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그래서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등 기타'로 전부 다 묶어놓은 사항들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지요. 118억 원 중에 98억 원입니다. 그러면 명확히 표시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의 내용을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그다음에 또 이어서...
- 고낙준 재정팀장
 - 9개 사업을 전부 나열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9개를 다 나열할 것은 없고, 큰 항목으로 EBS 디지털전환사업 지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내용을 더 보충해서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안건은 5페이지 계속사업 중 증액사업의 기타란을 시청자...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분리해서 워딩을 하면...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든지 시청자권익보호 활동 사업과 그다음에 그 이외의 다른 사업 중 중요한 것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수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지났습니다만 아까 본문의 워딩이 그렇다는 것이지, 예산 편성 내용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고삼석 위원님 새로 제3기 방통위에 합류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 다시 각오를 다지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신 것 가지

고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자꾸 오늘 제3기 정책방향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하여튼 언젠가 조만간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게 될 기회에 고 위원님 오늘 인사말씀에서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파트에서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 중에 방통위가 귀를 닫거나 눈을 감거나 내지는 전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제3기 방통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슈 때마다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것에 관한 토론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김재홍 위원님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일단 총론적인 토론을 한 번 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으로 제가 마주 보고 있는 이기주 위원님과 가장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마주 보고 있으니까 정도 많이 들겠지만 그만큼 더 많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주 위원님께서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저와 이기주 위원님, 저희 둘은 잘 알지만 2005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 내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청와대에서는 제가 주무를 맡았었고, 또 이기주 위원님께서도 정보통신부에서 주무를 맡아서 저희가 나름 잘 호흡을 맞춰 가면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홍 위원님과 허원제 부위원장님께서도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넘긴 법안을 가지고서 검토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많은 기능들이 옮겨 갔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6년 동안 제가 최초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 발표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님들에 대해서 또 누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일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6년 동안 밖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활동과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제가 외부 관찰자로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방송계에 이것은 엄청난 현안들입니다. KBS가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88%의 직원들이 사장에 대해서 불신임하고 그 사장이 해임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연주 사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해임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이 났던 것이기 때문에 방송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에 길환영 사장이 해임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MBC는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파행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해고된 분들이 MBC, YTN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방송사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입하는 데는 법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들이라면 법에서 정하는 아주 엄밀한 해석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과 원칙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개정도 해야 하고 또 제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방송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설사 저희가 입장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청와대에 넘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로 넘길 것입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위원님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밖에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던 것은,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부터가 이러한 비판을 나중에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과제에 대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워크숍에 앞서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논의된 언론에 대한 토의도 같이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워크숍을 꼭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 내용이 많으면 계속 날짜를 바꿔 가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이야기가 되고 또 서로의 입장에 따른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KBS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기자·PD들의 억울한 희생을 더 이상 내지 않고 조기에 수습이 되어서 꼭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도 방통위가 그동안에 한 달여 이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한 달 이상에 걸쳐서 매주 한 번 이상 이 자리에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5월 9일 이후 지난 주 6월 6일 파업이 중단되고 정상화되기까지 방통위의 역할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보니까 다시 공영방송이나 반공영방송이라고 일컬어지는 MBC가 2012년 총파업 사태와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역시 지난번, 지금까지 토론처럼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는 MBC는 반공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MBC의 최고경영기관인 방문진 이사들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출합니다. 역시 일반 국민들은 방통위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직무, 찾아봐야겠지요. 올해 3월 중순 이후 지금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뒤에 2012년과 똑같은 기자·PD 징계 전철을 밟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총 16건의 정직, 감봉, 부당전보, 업무배제가 있었습니다. 기자 9건, 조능희 PD 같은 분들 포함해서 PD 7건, 이것이 바로 MBC 2012년 총파업 사태의 전조입니다. 이것이 번지면 KBS 사태, 정말 어렵게 여러 단위에서 지적하고 압력도 넣어서 결국 이사회에서 자체 결의해서 해결이 됐는데, MBC가 또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지금 월드컵 중계권료를 둘러싸고도

방송협회와 케이블방송협회가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MBC의 총파업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방송정책국의 지상파방송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2012년의 그 경험을 방송정책국 간부들이 알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면 그것을 제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은 거둬 말씀 드리지만 예방입니다. 아주 안 좋은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법처리와는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권을 최대한 이용해서 역시 방문진이 해야겠지요. 사장이나, 더 이상 2012년의 파업사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하고, 부당징계가 아주 많으면 그런 전조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MBC 경영진에 주의나 더 악화되면 경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이고 국민의, 시청자의 권익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MBC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책 담당부서가 관심 깊게 지켜보고 그런 주문이나 자료제출, 비공식적이라 하더라도 2012년도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똑같은 것인데 그 부당징계의 현황을 알려달라든가, 많은 국민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정책기구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논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의날짜를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0분 폐회 】